



주간통일정세 2011-16(2011.04.11~04.1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 억류 인정(4/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인 전용수가 조선에 들어와 반공화국범죄행위를 감행해 지난해 11월 체포됐으며 해당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며 미국이 한국계 미국인 1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14일 북한이 억류사실을 공개함
 - 중앙통신은 전씨가 조사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했으며 전씨의 체포 사실 등이 해당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통보됐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나 조사 기관, 미국으로의 통보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중앙통신은 "북한 내 미국의 이권을 대표하는 주조 스웨덴대사관과 연계해 영사접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편이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
 - 60대 미국 시민권자인 전씨는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北김영남 "南-美 도발책동 수수방관 않을 것"(4/14, 연합뉴스)**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여놓아 정세를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미국과 남조선 보수 당국의 군사적 도발책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99회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밑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
 - 그는 "국방공업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자위적 군사력의 물질적 토대를 첨단기술에 기초해 끊임없이 강화할 것"이라며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군민 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김일성 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맞이해야 한다" 며 "올해 경공업에서 근본적인 비약을 이룩하고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 경제건설 전반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덧붙임.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대회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장성택·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최룡



해·김양건 당비서 등이 참석

● **김일성 생일 맞아 北 전역서 주민 총동원(4/15, 연합뉴스)**

- 평양방송은 "김일성 동지의 탄생 99돌 기념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14일 각 도·시·군에서 진행됐다"며 "보고대회에는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 각 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했다"고 밝힘.
- 방송은 "함경북도와 평안남도, 황해북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선교편직공장을 비롯한 각지에서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뜻 깊게 맞이하기 위한 예술소품공연을 실속 있게 벌이고 있다"고 소개
- 김 주석의 생일행사에는 각급 사회단체도 동원돼 우리의 노충격인 조선 직업총동맹은 14일 만수대 동상 앞에서 총성맹세모임을 가졌고,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서는 농업근로자의 맹세모임이 열렸으며, 조선소년단은 같은 날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전국연합단체대회를 열고 올해 신입단원의 입단식을 갖기도 함.
- 하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김일성 민족의 최상최대 명절로 맞이해야 한다"며 "올해 경공업에서 근본적인 비약을 이룩하고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 경제건설 전반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해보다는 김 주석의 100회 생일에 맞춰 '강성대국의 해'로 설정해 둔 내년 생일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

● **김정일·정은, '태양절' 맞아 보위부 공연관람(4/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을 맞아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함께 국가안전보위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으나 공연의 장소와 관람 일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은 관람을 마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수령님의 강성대국 건설 염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세, 전면 돌파전을 세차게 벌려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 수령님의 탄생 100돌을 김일성 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 대경사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함.
- 이날 공연관람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홍석형 당비서, 김정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태종수·김평해·문경덕 당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이 동행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원군사업에 모범을 보인 최성호 무역성 국장 등에 감사 (4.12, 중방)
- 김정일, 6.18건설돌격대 지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4.14, 중방)
- 김정일, '태양절' (4.15)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과 함께 국가안전보위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4.16, 중통)

나. 경제

● 北 금강산에 카지노 계획...中관광객 유치 의도(4/12, 자유아시아방송(RFA))

- 금강산 카지노 추진설은 북한 측이 현대 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고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라선시에 이어 금강산에도 카지노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의 RFA가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 북한관광 전문여행사를 경영하는 오모씨는 "북한이 남한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강산 카지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사실을 신분을 밝힐 수 없는 북한 당국의 한 고위간부로부터 수개월 전에 들었고, 북한 당국이 현대그룹과 맺은 금강산 관광 독점계약을 파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함.

● 北 식량난에 小토지 경작 목인(4/12, 자유아시아방송(RFA))

- RFA는 북한 내부 주민과 연락하는 한국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를 인용, "작년까지 당국이 개인주의라는 이유로 강력히 통제하던 소토지 농사가 올해는 목인되고 있다" 며 "이는 작년에 소토지 농사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마주했던 당국이 주민 반발을 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농산물 생산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
- 북한은 지난해 인민보안서, 산림경영소 단속원을 활용해 개인이 심은 강냉이와 콩을 모두 뽑고 나무를 심는 등 강력히 단속했고, 이에 주민들은 단속원과 거친 몸싸움을 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고 방송은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주민은 "올해는 농사를 지으려고 강냉이를 심을 수 있는 밭을 샀다. 요즘 소토지 한 평을 사려면 평당 200원은 줘야 한다"며 "산림경영소에서는 소토지를 더 확장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묘목의 키가 50cm 이하인 땅에는 곡물을 심어도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 방송은 또 "한 공업림 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의 식량배급을 해결하고자 관할 구역의 산림을 개인에게 나눠주고 가을에 강냉이로 받는다고 한다"며 "결국 땅을 관리하는 국가가 개인들에게 소작을 주는 격"이라고 설명



다. 군사

● 北 "美 적대시할수록 핵 억제력 강화" (4/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북한대표가 지난 4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해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이 기중되면 될수록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힘으로 핵 억제력 포기를 시도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심화하는데 따라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북한 대표는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데 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핵군축이나 핵위협 제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 열강의 독점적 지위를 합리화해주었을 뿐 아니라 자주적인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압력과 간섭공간으로 악용됐다"며 "블럭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 성원국들은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핵군축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본회의에 내놓았고 그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이 자리에서 북한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위치를 재차 강조

● 北 황병서·오일정 상장 승진...軍인사 단행(4/13, 조선중앙방송)

- 북한 노동당의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오일정 군사부장이 우리의 중장격인 상장으로 승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2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상장 2명, 중장 5명, 소장 38명을 승진토록 하는 내용의 명령을 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발표
- 상장으로 승진한 황병서 부부장은 올해 62세로 당 조직지도부에서 군사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 김 위원장의 각종 시찰에 동행하면서 주목을 받아옴.
- 황 부부장과 함께 상장이 된 오일정 당 군사부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 1세대인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로 작년 9.28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군사부장에 오른바 있음.



라. 사회·문화

● 北, '태양절' 예술단 초청위해 전세계 띄워...(4/11,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을 기념해 개최하는 봄 친선 예술축전에 올해에도 대규모 외국 예술단을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를 비롯한 옛 동구권에서도 200여 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한 것으로 전해짐.
-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러시아 소식통은 "북한이 고려항공의 신형 여객기 투폴레프(Tu)-204를 모스크바로 보내 9일 새벽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옛 동구권 문화·예술계 인사 200여 명을 태우고 평양으로 갔다"고 전함.

● 통일부차관... "北 휴대전화 가입자 45만 명" (4/12, 연합뉴스)

-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 이동통신 현황과 투자기회 및 전략'을 주제로 '조선비즈'가 주최한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의 이동통신 현황에 대해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2008년 12월 이집트 오라스콤사와 합작으로 재개된 이래 가입자 수가 작년 말 현재 45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힘.
- 그는 "지난 3월 북한 스스로 전국적인 3세대 이동통신망을 형성했다고 발표했고 외신 등을 통해 평양의 젊은이와 시민이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며 "이는 권력 엘리트층에 한정했던 이동통신 이용자의 범위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평가

● 北무상의료 '빈말' ... "고가선물 줘야 진료 가능" (4/13, 자유아시아방송(RFA))

- RFA에 따르면 최근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 370명을 조사한 길버트 번햄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북한의 무상치료제도는 실제와 크게 달랐다"며 북한에는 무상의료가 법제화돼 있지만 주민들은 의사에게 월급만큼의 선물을 주고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소개
- 번햄 교수는 "90% 정도의 북한 주민이 의사에게 (돈이나 식량, 담배, 술 등의) 선물을 줬다고 한다"며 "농민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월수입의 140%를 선물비용으로 썼고, 사무직 근로자는 월수입의 80%, 공장 근로자는 60%를 사용했다"고 전함.
- 번햄 교수의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북한의 열 가구 중 여덟 가구에서 최소 한 명이 입원을 했고 환자 10명 중 2명은 어린이였고 또 환자 대부분이 영양실조로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나타남.
-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 무료로 결핵 치료약을 제공해도 약이 중간에 빼돌려져 시장으로 흘러나가고 있고, 환자들이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하는 바람에 균을 죽이기 어렵고 전염도 높은 '다제내성결핵'



에 걸리는 일이 많다고 전함.

- **北 봄 가뭄 심각...식량사정 나빠질 듯(4/14,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올해 들어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자주 들어 가면서 현재까지 북한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20.1mm로 평년의 33%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히 회령시, 라선시, 대흥단군은 강수량이 0.1mm, 1.4mm, 3.8mm로 땅을 잠시 적시는 데 그치는 등 봄 가뭄이 심각하다고 보도
 - 중앙통신은 "가뭄(가뭄) 현상은 밀, 보리 생육은 물론 감자, 강냉이를 비롯한 밭작물 씨불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평양, 신의주, 사리원, 해주, 개성 등 서해안 지방의 무(無)강수 지속일수가 97일인데 이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전함.
 - 기상청 관계자도 "지난달 19일과 27~28일 북한 지역에 비와 눈이 내렸으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이달에 강수량이 많지 않았다. 4월 하순에도 평년보다 적다"고 말해 중앙통신 보도내용을 뒷받침

■ 기타 (사회문화)

-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4.11 첫 공연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윤이상음악당을 비롯한 8개 극장에서 진행(4.11, 중통)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4.12 최룡해(黨 비서), 강능수(내각 부총리), 박명철(체육상/개막사) 등 참가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11, 중통)
- 제13차 김일성화축전, 4.13 평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개막(4.13, 중방·중통)

2. 대외정세

가. 정치

- **北 '일본해' 표기 日 규탄(4/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노동신문 1면의 논평을 통해 "일본은 파렴치한 역사지명 왜곡행위를 중단하라"며 "과거범죄에 대한 성근(성실)한 반성과 사죄만이 일본의 진정한 재생과 공존, 공영의 길이다"고 강조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데 대해서 규탄
 - 신문은 '일본은 과거 일제의 조선강점 정책의 범죄적 산물인 일본해 표기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제하의 북한 역사학회 고발장을 인용해 "동해는 시원적으로 가장 오랜 조선 동쪽바다의 전통적인 이름"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에 대한 근거로 동해가 '조선해' 로 표기된 일본 천문학자 다카하시 카게야스(1785~1829)가 1809년에 만든 '일본번계략도' 지도 등 일본의 고(古)지도를 내세움.
- 또한 신문은 메이지유신 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야망이 증대되고 조선 강점 정책이 단계적으로 노골화되면서 동해가 19세기 말 이후 '일본서해' '조선일본 량해(兩海)' '일본해' 로 점차 바뀌었고, 독도도 '다케시마'로 둔갑돼 을사조약(1905년)을 계기로 일본영토에 편입됐다고 지적

나. 6자회담(북핵)

● 우다웨이-김계관 회담..6자회담 단계적 재개검토(4/11,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단계적 계획(step-by-step plan)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담 뒤 밝힘.
- 우 대표는 기자들에게 첫 번째 단계는 남북한 수석 대표 간 회담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함.
- 김 부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우리농축 프로그램은 6자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가려는 한미일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함.

● 위성락 "단계적 6자 재개, 北반응 보고 있다" (4/13,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필립 골드버그 정보조사담당 차관보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북미접촉을 거쳐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비핵화 문제에 대해 남북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1-2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라면서 "우리 제안이 던져져 있기에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있다"고 밝힘.
- 위 본부장은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관련된 사과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추가 설명을 통해 "딱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끊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자신의 발언을 부연 설명
- 그는 또한 "6자회담으로 가기에 앞서 우리는 생산적인 6자회담 논의를 위해 올바른 환경(condition)을 만들 것"이라면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된 미국 측 입장에 어떤 변화도 보지 못했다고 전함.



■ 기타 (대외)

- 韓美 대량살상무기(WMD)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회의(3.28~29/하와이)개최 등 관련 "변함없는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며, "전쟁억제력 강화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 강변(4.13, 중통)
- 中잡지(세계지식 6월호)에 실린 '국제적 핵 전파문제' 와 관련한 글을 소개하며 "핵 대국들이 횡적 및 종적 핵 전파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세계 핵 전파방지체제를 수호하는 관건, 비핵세계건설의 목표 실현 열쇠"라고 주장(4.13, 중통)

3. 대남정세

● 통일부 "北금강산 조치 즉각 철회해야" (4/11, 연합뉴스)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은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라며 북한이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밝힌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힘.
- 천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측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태를 주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상황전개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해 취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

● 내달 백두산화산 학술회의...6월 현지답사(4/12, 연합뉴스)

- 양측은 이날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제2차 전문가회의를 열어 백두산 화산연구를 위한 전문가 학술토론회를 5월 초 평양이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하고 백두산 현지답사는 6월 중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합의문에서 백두산 화산 분출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하고 또 학술토론회, 현지답사와 관련한 구체적 날짜와 실무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수석대표인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이날 밤 귀환 후 경기도 문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우리 측은 백두산 화산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임했고, 북측은 화산활동 징후와 관련해 예년보다 최근 백두산 지진현상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토론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북측이 백두산 화산활동의 구체적인 징후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었고



학술토론회 전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다"고 설명

- 유 교수를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과 북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15분 부터 오후 8시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마라톤 회의'를 했고 대표단은 오후 8시50분께 경의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리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

● 北 "백두산 합의 실천 남측에 달려" (4/1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2일 열린 백두산 화산연구 회의와 관련, "합의서는 일단 채택됐지만 그 실천여부는 남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남측은 백두산 화산 징후에 대한 자료를 먼저 넘겨주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장시간 뻘치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를 들고 나와 고의적인 난관을 조성했다"며 "자료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무한정 지연시키면서 북남협력에 나서지 않으려는 생억지"라고 주장
- 방송은 "(남측의 태도로) 접촉은 결렬위기까지 놓이게 됐다"며 "남측은 결렬의 책임을 쓰게 되자 회담장에서 철수했고 무려 4시간이나 시간을 끌다가 마지못해 우리(북)측이 제시한 합의서에 수표(서명)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함.

● 남북, 백두산연구 합의 하루 만에 신경전(4/13, 연합뉴스)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합의사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북측 관영매체가 '얼토당토않은 주장' 등의 표현을 하면서 합의 내용을 폄하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불쾌한 반응을 간접적으로 내비침.
-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측 전문가들은 6개월 선행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약 2년에 걸쳐 본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
- 이 당국자는 "학술회의와 현지답사 합의는 전체 양해각서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 단 건에 불과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연구 과정에서 백두산에 대한 수시접근, 신변보장, 전체 연구일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양해각서가 필요하다"고 말함.
- 4시간이나 시간을 끌다 마지못해 서명했다고 북측이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문구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특별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

● 北 "관광 독점권 취소, 남북합의·국제관례 부합" (4/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 효력 취소조치에 대해 "사업 당사자 간 및 남북 당국 간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공화국법과 국제법, 국제관례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남조선 당



국은 금강산관광 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상보에서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봐도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 그 일방은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힘.

- 상보는 이어 "현대 측과 맺은 합의서 제8조 2항에는 양측이 어느 일방이 합의서 및 부속문서에 규정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함으로써 인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일방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현대 측과의 이 합의 이행마저 방해해 부득불 합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
-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파탄됐음에도 현대 측에 남측지역 관광을 계속 일임한 것은 현대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의와 특혜의 표시로 앞으로도 현대 측과의 신의를 귀중히 여기고 금강산관광산업을 손잡고 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후 "우리는 현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지난 근 3년 동안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참고 또 참아왔다"며 "남조선 당국은 그 어떤 궤변으로도 금강산관광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

■ 기타 (대남)

- 韓-美 '핵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北核위협 대비/하반기)합의 관련 "주객이 전도된 핵전쟁광신자들의 무모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며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의 정당성 주장 및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경우 지구상에서 핵위협의 근원을 송두리째 짓뭇개 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4.11, 중통·노동신문)
- 韓-美 '확장억제정책' 개최(핵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합의) 등 관련 "북침 핵 선제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위험천만한 전쟁모의"라고 持續 비난 및 "자위적 전쟁억제력 더욱 강화" 주장(4.14, 중통·민주조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美 적대시할수록 핵 억제력 강화" (4/11)

-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심화하는데 따라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평양방송은 11일 북한대표가 지난 4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 참석해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이 가중되면 될수록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힘으로 핵 억제력 포기를 시도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북한 대표는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표는 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핵군축이나 핵위협 제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핵 열강의 독점적 지위를 합리화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자주적인 발전도상 나라들에 대한 압력과 간섭공간으로 악용됐다"며 "블럭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 성원국들은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핵군축의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본회의에 내놓았고 그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자리에서 북한 대표는 "대화과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위치를 재차 강조했다.

● 美 "北문제, 中과 긴밀협력 유지" (4/12)

-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1일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등을 통해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셉 윤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과 폭넓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런 논의는 미·중 관계를 부각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20년 만에 군사정권이 퇴진한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논의해왔으나 북한에 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 이어 조셉 윤 부차관보는 미얀마가 지난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 2008년 다시 정상화한 것에 대해 "이는 당



시 국제정세에서 양국이 처한 상황이 유사했기 때문"이라며 "두 나라는 모두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그러면서 "미 정부는 북한과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다자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고, 미얀마와는 양자적 관계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셉 윤 부차관보는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미얀마가 북한의 지원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만 따라가면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음. 이는 지난 2009년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안 1874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기금수와 금융제재, 선박검색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한편 '미얀마와 남북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얀마 특사를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미얀마가 자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낮고, 북한과 핵개발 관련한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진단했음.

● 中우다웨이 "6자회담 단계적 재개검토" (4/12)

- 중국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11일 밝혔음.
- 우 특별대표는 이날 밤 외교부 인근 식당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찬을 하고 난 뒤 밖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음.
- 우 대표는 첫 번째 단계는 남북한 수석대표 간 회담이 될 것이며, 두 번째 단계에는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음.
- 김 부상은 농축 우라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6자회담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니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또한 농축 우라늄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한·미일의 입장에 대해서는 "토의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음.

● <北中, 6자 재개압박 외교행보 나설듯>(4/12)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를 압박하는 양국의 외교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임. 양국은 우선 김 부상 방중 닷새째인 11일 밤 베이징(北京) 외교부 부근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남북 수석대표 회담→북미접촉→6자회담 재개라는 북·중 회담 합의 내용을 알렸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중 양국이 이처럼 6자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 '합의'에 도달한 만큼 관례대로 중국이 6자회담 참가국에 이를 개별 통보하면서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은 베이징 내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대사관에 북·중 회담 결과를 디브리핑(사후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우다웨이 대표 등이 관련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북측이 남측에 다시 대화 공세를 펼치며 남북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직접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2~14일 방미해 미 측 카운트 파트를 만나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6~17일 방한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회담 재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또 러시아의 행보도 주목됨. 러시아는 지난달 11~14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외무부간 정례 협의회에서 북측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근래 부쩍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김 부상은 지난 7일 방중 후 주중 북한대사관에 머물면서 중국 측 카운터 파트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여러 차례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관측됨.
 - 김 부상은 12일 오후 고려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 김 부상이 이례적으로 옛세 동안이나 베이징에 체류한 것은 양국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회담 내용과 관련해 북한 측 상부의 훈령을 기다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옴.
 - 양국은 일단 3단계의 회담재개 프로세스와 더불어 북한의 우리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6자회담 회의장에서 논의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주문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의 영변 핵시설 복귀, 북한 우리농축프로그램(UEP) 관련시설 사찰 실시 등의 요구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3국이 6자회담 재개 전(前)에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북·중 양국이 3단계 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정한 것은 6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시키자는 압박성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남북 당국 간 대화가 군사실무위원회 회담결렬로 수개월여 지루한 공방을 보이자 중국이 남북대화과 6자회담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쳐왔다는 점에서, 북중 양국의 6자회담 재개 급가속 행보는 이미 예견돼 왔다는 지적임.
 -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남북대화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한 마디 하지 않았을 뿐더러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이 북·중 양국의 3단계 대화 재개 프로세스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더욱이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고서는 북미 간 회동을 '지양' 한다는 입장인바 북·미 접촉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함.

- 일각에서는 미국이 연이어 터지는 중동사태에 발목이 잡혀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다시 북한의 도발성 '강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6자회담 재개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 <전환점 맞는 한반도정세..6자 재개 '점점' >(4/12)

-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변곡점에 올라서고 있음. 그동안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둘러싸고 평행선 대치를 그려온 남북마중이 '의미 있는' 점점을 마련하고 있는 흐름임.
-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재개 프로세스가 그 공통분모임. 이는 한미가 그동안 주장해온 밑그림을 북중이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형국임.
- 중국 6자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첫 번째는 남북 수석대표 회담이며, 두 번째 단계는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라고 말했음.
- 북중 협의 직후 나온 우 대표의 발언에는 북한 측의 입장이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서울→워싱턴→베이징'으로 가는 밑그림은 이미 5자간 컨센서스가 형성된 구상임. 그러나 중국 측이 이를 공식 확인하고 북한이 이를 동의하는 흐름은 현 정세흐름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임.
- 5자간 컨센서스 속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남북대화를 정식 제의해온다면 이는 '동면'해온 6자회담 재개 흐름에 강력한 온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그간 비핵화 남북대화를 기피해온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는 배경임.
- 우선 마중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음.
- 커트 캠벨 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방중과 이와 맞물린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의 방중 직후 뚜렷한 변화의 흐름이 생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남북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을 개연성이 있음.
- 그러나 기존 정세운용 방식으로는 국면 돌파에 한계를 느낀 북한이 '전략적 수정'을 꾀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음.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중국 외에도 미국과 비공식 라인을 가동하며 충분히 분위기를 타진해왔다"며 "중국의 역할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대응전략 모색일 수 있다"고 말했음.
- 6자회담 재개 수순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교집합이 형성되면서 외교가의 관심은 비핵화 남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모아지고 있음. 이번 북중 협의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정식 외교경로로 비핵화 남북대화를 제의해온다면 애초 이를 제안한 우리 정부로서는 적극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 북핵 해결을 주제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처음



- 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비핵화의 진전이 가시화되면 현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결정적 돌파구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북미, 북일대화가 진전되고 이는 다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대화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순' 보다는 '내용'에 놓일 것으로 분석됨. 5자가 단계적 수순의 첫 단추인 남북대화라는데 합의했지만 각론에 들어가 '어떤 내용'으로 다뤄나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상이몽인 탓임.
 - 특히 남북대화가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될 경우 다시 한미 대(對) 북중의 외교적 갈등과 대치가 재연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있음.
 - 무엇보다도 우리 측은 남북대화를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장(場)으로 활용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련의 비핵화 선행조치를 주문할 공산이 큼.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을 비롯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선전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임.
 - 특히 남북이 각기 입장을 고수하는 선에서 어정쩡한 결론이 나올 경우 중국은 다음 단계(북미 대화)로 가자고 주장하고 우리 측은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음. 이런 가운데 미국이 어떤 전략적 입장을 정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임.
 -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기존의 선(先) 비핵화 조치를 고수할 경우 상황이 급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미국이 남북대화 성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내용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경우 북미대화도 진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 이런 맥락에서 16~17일로 예정된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한미 양국의 향후 대응전략을 설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세흐름을 좌우하는 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12~16일)는 한미간의 입장을 미리 조율해보는 실무급 협의로 볼 수 있음. 우리 측은 '선 비핵화, 후 6자회담'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달 말로 예정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김정일 면담 여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식량지원 움직임은 대화국면 쪽으로 이끄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나 유엔 안보리의 UEP 대응 논의는 압박 국면을 강화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中 "6자회담 조기 재개조건 만들자" (4/12)
- 중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으로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자고 촉구했음.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중국 방문을 통한 북·중 회담 결과를 묻는 말에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6자회담 등과 관련해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홍 대변인은 김 부상이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 부부장의 초청으로



방중 했으며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각각 만났다고 확인했음.

- 홍 대변인은 이어 '우 특별대표가 전날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중국의 새 입장이나'는 질문에 "(북중) 쌍방은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 관련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답했음.
- 홍 대변인은 "중국은 각종 접촉을 통해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남북 쌍방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면서 "6자회담은 현재 정지된 상태이지만 중국은 줄곧 회담 재개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중국은 관련국들이 접촉을 늘려나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北 대화에 진정성 갖고 나와야" (4/12)

- 외교통상부는 12일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남북 수석대표 회담→북·미 접촉→6자회담'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한 데 대해 "우선 북한이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호응해온다면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사항이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조 대변인은 "대화 문제에 우리 정부는 늘 개방적인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으며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음.
- 정부 핵심당국자는 "비핵화의 진전이 본령이 돼야지 6자회담 개최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며 "남북 수석대표 회담을 출발점으로 제시한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6자회담으로 이어지려면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방미에 앞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회담이나 6자회담을 여는 것은 절차적 수단에 불과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 6자회담 재개 촉구(4/13)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6자회담이 북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며 회담 재개를 촉구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방문에 앞서 중국 CCTV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이 주도하는 북한과의 양자 협상 등의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관계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



장했음.

- 크렘린 웹사이트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가능하다고 보며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성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은 물론 한국과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 문제(한반도 문제)에서 어느 한 국가가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음.
- 그는 "이는 우리가 단독 혹은 양자 협상 등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협상의 효율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종종 이 모든 일을 한 나라 특히 미국한테 맡겨 버리면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해 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세계는 집단 안보 시스템을 만들어 (안보)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그래서 6자회담이 훨씬 객관적 메커니즘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한이 협력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원자력 에너지와 핵 프로그램 등이 철저히 평화적이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특정한 자극을 주도록 노력하고 대화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만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어 전쟁 직전까지 고조됐던 지난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 상황에 대해 "러시아도 동북아 지역의 일원이며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며 "만일 군사적 시나리오가 시작됐더라면 이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무력 사용은 확산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이 주변 국가들의 개입으로 이어져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지적임.
- 그는 "이 지역(한반도 주변 지역)은 많은 사람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은 모두에게 그야말로 무서운 시련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한반도 문제)의 해결에서 군사적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음.
- 또 "감정 격화와 무력 과시, 다양한 군사훈련 등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물론 이것이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순간이 되면 통제 메커니즘이 무너지면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과제는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성락 "비핵화회담 성사여부 北반응에 달려" (4/16)

- 한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 "남북 간 비핵화회담은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 위 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연합뉴스와 전화



- 통화에서 최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제시한 '남북 수석대표회담-북미접촉-6자회담'의 단계적 접근법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 그는 '중국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하자고 북한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들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 위 본부장은 "회담의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진전"이라면서 "남북 간 회담에 진전이 있고 대화가 원만히 이뤄져야 6자회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천안함 사건은 6자회담 재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음.
 - 위 본부장은 또 "미국 방문기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공조를 재확인했다"며 "북한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 등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미국과 계속 상황을 평가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위 본부장은 지난 12~14일 미국을 방문해 커트 캠벨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만나 북한 문제를 협의했음.

● 한·미 "北 비핵화 진정성 행동으로 보여야" (4/16)

- 한·미 양국은 16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에 대한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음.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음.
- 한·미 양국의 이 같은 공동입장 표명은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 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북·중의 '3단계' 대화체제의 대한 공식 대응임. 남북대화 제의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이 제시돼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됨.
- 양국 장관은 또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이 도발적 행동들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음. 이어 북한의 우리농 축 프로그램(UEP)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제사회가 이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 한미 동맹 재조정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음.
- 양국은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2+2' (외교·국방) 차관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음. 양국은 작년 7월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2+2' (외



- 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2+2 차관보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음.
- 양국은 특히 양국 외교부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외교관들을 상호 파견 형식으로 교환 근무시키기로 합의했으며 2+2 차관보급 회의에서 '외교통상부-국무부간 인사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양국은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복구재건 지원에도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음.
- 이밖에 최근 중동사태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기타 지역과 범세계적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고위당국자 "北 반응 기다리고 있다" (4/17)

-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우리 측이 제안해 북측이 수용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 안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제기한 남북 비핵화 대화에 대해 북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북한은 지난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중 협의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금주 중 남북 비핵화 회담을 정식으로 제의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당국자는 3단계 안을 통한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남북이 접촉해서 성과가 있으면 마북 접촉을 하고 거기서 성과가 있으면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라면서 "징검다리 건너듯 하나의 통과이레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려는 협상과정"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남북대화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 북미대화로 진전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딱 정해놓은 것은 없다"면서 "한미가 그 결과를 평가하고 협의한 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비핵화 행동을 남북대화를 통해서만 모두 보이려는 게 아니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면서 "북미 접촉 과정에서도 한미간의 지속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한미 간 전략적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음. 그는 이어 "일정시점에서는 남북 대화와 북미대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한미가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들은 러시아 측이 북한을 방문해 제안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말했음. 사전조치에는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 활동의 중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영변지구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3단계안의 성안과정에 언급, "남북 간에 핵문제를 직접 논의한다는 것은 작년 여름부터 우리가 제기했고 미국이 완벽하게 동의했으며 중러 에도 설명해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었다"고 설명했다.
- 이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6자회담 재개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두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는 (6자회담과 관련한) 우리의 모든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그러나 "두 사건이 남북 비핵화회담에서 논의될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남북 비핵화 회담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다룰지, 누가 회담주체로 나설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비핵화 회담과 별도로 군사회담에서 다룰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떤 대화채널로 이뤄질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최근 중국이 설명해온 북중 협의결과에 언급, "북한은 중국에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변함없다고 소개하고 UEP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며 6자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미국인 1명, 북한에 억류 중" (4/13)

- 미국인 1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고 미 국무부가 12일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인 1명의 북한 억류 사실을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인의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다.
- 토너 부대변인은 "이 미국인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석방해 주기를 북한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이 미국인을 국제인권법에 부합되게 존중하고 처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의 평양주재 대사관을 통해 억류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했다고 전했다.
-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억류 미국인의 신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억류 경위나 시기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면서 "이 미국인의 북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 미국인이 북한에서 수개월째 억류되고 있다"고 전했다. ABC 방송은 익명의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미국인이 지난해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고 보도했다. 또 CNN 방송은 억류 미국인이 한국계 미국인 남성 기업인이며, 북한의 입국 시증(비자)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억류 미국인에 대한 정례적인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이번이 네 번째임.



- 토너 부대변인은 이번 역류 미국인이 이달 말 재방북 할 예정인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 기회를 통해 석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음. 다만 그는 "그(카터)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언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음.

● 美 "北 식량상황 계속 주시" (4/14)

- 미국 국무부는 13일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미국 자체의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음.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세계식량계획(WFP)의 조사 결과에 대한 미국 자체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하지만 그는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 평가를 위한 실사단 파견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음.

다. 중북 관계

● 中훈춘-北라선-러 잇는 '3국관광' 개시(4/13)

-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과 북한의 라선, 러시아 극동을 잇는 '3국 관광'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장춘일보(長春日報)가 13일 보도했음. 신문은 3국 관광 노선이 중국 국가여유국의 승인을 얻어 이달부터 관광객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음.
- 중국의 산장(三疆)국제여행사와 러시아 극동국제연합부, 북한의 라선관광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 관광 노선은 훈춘에서 출발, 러시아 슬라반카와 하산, 북한의 두만강시와 라선시를 둘러보게 됨.
- 훈춘에서 슬라반카를 거쳐 북-러 간 철도를 이용, 라선을 둘러보고 훈춘으로 돌아오거나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에서 라선에 이어 러시아 하산을 둘러보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2개 코스로 운영됨.
- 3국의 여행사들은 지난해 초 현지답사를 통해 통관 절차와 관광 일정, 노선 등을 점검했으며 같은 해 9월 이 관광 노선 공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음. 북한은 이 노선 이외에도 북한 관광 노선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동북지구 관광업 발전 계획' 을 통해 지린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북한 혜산 노선과 연지(延吉)-훈춘-팡촨(防川)-라진-청진 관광노선을 새롭게 개발하겠다고 밝혔음. 연변자치주도 훈춘에서 라진을 거쳐 평양과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북한관광 노선 개발을 위해 북한과 협의 중임.
- 지금까지 중국의 북한관광 노선은 단둥에서 신의주를 거쳐 평양에 들어가는 노선과 연변에서 산허(三陟)와 청진, 칠보산을 둘러보는 코스, 백두산-삼지연-평양을 잇는 코스 등에 불과했음.

● 中조선족기업, 평양에 첫 레미콘공장 건립(4/17)



- 중국의 조선족이 운영하는 레미콘업체가 북한에 최초의 현대식 레미콘 공장을 건립했음. 17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안동레미콘산업유한공사(대표 정영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한 건설업체에 시간당 120m³의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수출했으며 최근 이 설비 조립을 완성,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음.
- 북한은 벽체나 기둥 등 완성된 콘크리트 제품을 조립하는 전통 방식으로 건축물을 세우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 타설할 수 있는 현대식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안동레미콘의 설명임.
- 북한은 대동강 변에 건립된 이 레미콘공장의 가동에 따라 평양 10만 호 주택 건설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동레미콘에 생산 설비 3대를 추가 주문했음. 안동레미콘은 또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모래 채취용 바지선 1대와 채취 설비도 북한에 수출했음.
- 안동레미콘은 최근 북한의 추가 주문을 받아 바지선 2대를 제작 중임. 이들 바지선은 평양 대동강의 모래 채취에 투입될 예정임.
- 안동레미콘 정영수 대표는 "북한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결합시키는 전통 방식으로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에 건설된 레미콘 공장은 생산량은 적지만 북한 최초의 현대식 레미콘 공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 그는 "10만 호 건설 등 북한이 추진하는 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적어도 30-40개 이상의 레미콘 공장이 필요하다"며 "북한도 레미콘 공장 설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음.
- 그는 석산 개발 능력이 뒤지는 북한이 평양 일대 건설 사업에 쓰이는 골재 대부분을 대동강 모래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골재와 석재 개발 산업도 전망이 밝기 때문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라. 일·북 관계

● 北 '일본해' 표기 日 규탄(4/11)

-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한 북한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데 대해서도 규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노동신문 1면의 논평을 통해 "일본은 파렴치한 역사지명 왜곡행위를 중단하라"며 "과거범죄에 대한 성근(성실)한 반성과 사죄만이 일본의 진정한 재생과 공존, 공영의 길이다"고 강조했다.
- 신문은 '일본은 과거 일제의 조선강점 정책의 범죄적 산물인 일본해 표기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제하의 북한 역사학회 고발장을 인용해 "'동해'는 시원적으로 가장 오랜 조선 동쪽바다의 전통적인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 신문은 이에 대한 근거로 동해가 '조선해'로 표기된 일본 천문학자 다카하시 카게야스(1785~1829)가 1809년에 만든 '일본본계략도' 지도 등 일본의 고(古)지도를 들었음.



- 신문은 메이지유신 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야망이 증대되고 조선강점 정책이 단계적으로 노골화되면서 동해가 19세기 말 이후 '일본서해' '조선일본 량해(兩海)' '일본해' 로 점차 바뀌었고, 독도도 '다케시마'로 둔갑돼 을사조약(1905년)을 계기로 일본영토에 편입됐다고 지적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한국과 미사일방어 협력 논의" (4/15)

-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미사일방어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브래들리 로버츠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서 "한국과 양자적인 미사일방어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미래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대해 한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국이 요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약정에 최근 서명했다"고 전했다.
- 패트릭 오라일리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미사일방어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국가들과 미사일방어 프로젝트나 연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국을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 중 한 국가로 소개했음. 미국은 그동안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미사일방어와 관련된 협력 희망을 거듭 표명해 왔음.
- 한편 로버츠 부차관보는 이란과 북한을 미국 및 동맹국을 위협하는 주요 국가로 거듭 손꼽았음. 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포터 그릴리 기지의 30기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의 수가 향후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음.
- 이와 관련, 그는 요격미사일 저장고인 사일로 증설 공사가 진행 중임을 전하면서 지금보다 50% 증가한 최대 44기의 요격미사일이 필요시 배치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예정이라고 밝혔음.

● 美상무, 27-29일 방한..한·미 FTA 협의회(4/15)

- 게리 로크 미국 상무장관이 오는 27~29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상무부가 14일 밝혔음.
- 상무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로크 장관이 5명의 하원의원들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음.
- 방한단에는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뉴욕), 짐 맥더모트(워싱턴), 조지프 크롤리(뉴욕), 게리 피터스(미시간) 의원과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라이



커트(워싱턴) 의원 등이 포함됐음.

- 로크 장관 등은 이번 방한기간 한국 측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고 기업들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 이와 관련, 로크 장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 FTA로 인한 시장개방이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실질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클린턴 오늘 방한..한미 외교장관회담(4/16)**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 클린턴 장관은 13~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외무장관 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으로 입국해 저녁에 서울 한남동 외교통상부장관 공관에서 김성환 장관과 회담할 예정임.
- 클린턴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이후 9개월 만임. 양국 장관은 남북대화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대북 식량지원, 북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대응 등의 한반도 현안을 협의할 예정임. 또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양자 현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임.
- 클린턴 장관은 17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에서 강연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뒤 일본으로 떠날 계획임.

● **한·미, 핵연료 재활용 함께 연구한다(4/17)**

- 우리나라와 미국이 파이로(Pyro) 건식처리 등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 일정에 합의했음.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도 사용 후 핵연료를 버리거나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자력 발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두 나라가 지난 13일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핵연료 주기 한·미 공동연구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10년 동안 3단계로 나눠 파이로 처리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등을 주제로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음.
- 파이로 건식처리의 경우 2011년까지 모의실험 시설을 갖추고, 2016년까지 공학규모의 실증시설을 짓기로 했음. 2025년 이전까지 실용화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것이 목표임. 소듐냉각고속로(SFR)의 경우 2011년까지 개념설계, 2017년까지 SFR 실증로 표준설계를 마치고 2028년 실증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임.

● **李대통령, 클린턴 美국무 접견(4/17)**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전략동맹 강화 등 양국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가 3년 이상 지체돼 협정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안보적 이익을 양국 국민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 FTA에 대한 Barack Obama 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어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어려운 만큼 이런 때일수록 한·미일 3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원전 안전 문제가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는데 내년 서울 회의에서는 원전 안전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음.
- 클린턴 장관은 또 "Obama 대통령은 원전의 지속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 원전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원전 계획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음. 이 대통령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일본 원전 사태에 대해서도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 사태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음.
-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중동 문제는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미 양국이 중동 민주화와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에 희망했으며, 특히 한국이 리비아에서 미국인 철수를 도와준 것과 아프가니스탄 치안유지군에 연간 5억 달러를 지원해줄기로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긴밀히 공조·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음.
-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우리 측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음.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빌 클린턴 정부 당시 영부인으로 2번 방한했고, 국무장관으로는 이번에 4번째 한국을 방문했음.

나. 한중 관계

● 김총리, 방중 첫날.. "한·중은 순망치한" (4/12)

- 김항식 국무총리가 12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음.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로서는 5번째 공식 방문이며 지난 2007년 한덕수 총리 이후 4년만임.
- 김 총리는 방중 첫날인 이날 오후 중국 자동차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는 베이징(北京)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중국 진출 현황을 보고받고 공장을 둘러보며 중국 근로자들을 격려했음.
- 그는 이 자리에서 "양국 간의 협력은 단순히 주고받는 관계를 넘어 톱니바퀴처럼 서로 한 몸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순망치한(唇亡齒寒)' 형태"라며 "양국이 합작해 세운 베이징 현대아말로 새로운 협력관계의 상징"이라고 밝혔음.
- 이어 주중 한국문화원을 방문,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 젊은이들을



- 만나 "양국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문화를 이해하려면 언어가 가장 기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문화 교류에 가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음.
- 김 총리는 좋은 한국 책을 추천해달라는 한 학생에게 최근 미국에서 영문판이 출간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를 추천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책을 구해서 문화원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음. 한 한생이 김 총리 일행을 위해 준비한 '진도아리랑'을 부르자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기도 했음.
 - 김 총리는 대사관저에서 열린 교민대표들과 만찬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한 생각은 같지만 해결 방법에 이견이 있었는데 중국과 좋은 관계를 떠나서는 계속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을 꾀하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음.
 - 이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양국의)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당부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음.
 - 아울러 "(교민 대표들은) 양국의 우호를 발전시키는 첨병"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간 외교관으로서 양국의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 기여해 달라"며 교민들의 노고를 치하했음.
 - 김 총리는 방중 이틀째인 13일 한·중 총리회담과 공식 환영만찬을 비롯,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오찬, 중국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임.
 - 14일에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博鰲) 포럼이 열리는 하이난 다오(海南島)로 이동,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우크라이나·스페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지며 15일 보아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귀국할 예정임.

● 김총리 방중 이틀째..원자바오 총리와 회담(4/13)

-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항식 국무총리는 방중 이틀째인 13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김 총리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한·중 총리 회담에서 정치, 경제, 통상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눌 예정임.
-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우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총리는 이에 앞서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임.
-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베이징 한국상회 소속 기업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 전환에 맞춰 앞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



출에도 더욱 힘 써달라"며 기업인들을 격려했음.

- 그는 이어 중국 언론과 공동 인터뷰를 가진 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주최 오찬에 참석,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 김 총리는 14일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보아오(博鰲) 포럼이 열리는 하이난다오(海南島)로 이동,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우크라이나·스페인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지며 15일 보아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귀국할 것임.

● 원자바오, 韓·中 FTA 협상 개시 요청(4/14)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우리 정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개시 선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음.
-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방중 사흘째인 14일 베이징(北京) 리젠트호텔에서 현지특파원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원 총리는 우선 협상을 개시하고 문제를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김 총리는 그러나 "한·중 FTA의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우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것 보다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선행하지 않으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음.
- 김 총리와 원 총리는 전날인 1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총리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중 FTA도 논의됐음. 양국은 현재 FTA와 관련, 공동연구를 마쳤으나 이견으로 정부 차원의 협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
- 김 총리는 "중국 측은 한·중 FTA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 보였으나 농수산물 등의 민감한 분야와 관련해 신중한 고려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추진 방향과 일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 7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얘기였다"고 말했다.
- 김 총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 편들기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중국은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 북한을 궁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보이며 북한을 두둔하고(남북한을)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 김 총리는 중국의 대(對) 북한 투자에 대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요소"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대북 투자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 김 총리는 한·중 관계에 언급, "작년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해



- 법과 관련해 양국 간에 다소 이견을 보였으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차이였다"며 "대립관계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김 총리는 최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방중을 통한 북·중 회담에서 남북회담과 북미접촉에 이은 6자회담 재개라는 프로세스가 도출된 것과 관련해 "그와 관련한 남북대화가 어떤 레벨에서 어떤 시기에 열릴 지 아직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보였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음.
 - 김 총리는 남북 정상회담 등을 위한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노력이 어느 단계에 있는 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 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북한이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를 확인, 유도하기 위해 대화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사고예방과 사고시 대처 방안에 대해 한·중·일 3국이 서로 협조해야 하고 그런 협조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음 달 열릴 3국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인 의제로 올려져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中후진타오 "정치경제 등 4개분야 협력 강화" (4/14)

-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14일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풍부히 해서 새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날 오후 하이난다오(海南島) 싼야(三亞)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항식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 후 주석은 이를 위해 ▲정치 신뢰 심화 ▲긴밀한 경제 무역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다자조율 강화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언급했음. 후 주석은 "고위급 왕래와 대화 교류를 통한 소통을 심화하고 이해를 증진해서 정치 신뢰를 새 수준으로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 "2년 앞당겨 작년에 양국 교역이 2천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는데 2015년 3천억 달러도 실현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력 잠재력을 높이고 상호 투자를 늘리면서 양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의를 가속화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후 주석은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육·문화·예술 교류를 심화해 양국민의 친근감을 증진하고 민간 협력의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 협력, G20(주요 20개국), 유엔 개혁, 기후 변화 등에서의 협력을 제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후 주석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FTA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협상이 시작됐을 때 더 발전적인



-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 "수교 20주년을 앞둔 만큼 양적 성장과 함께 청년기다운 질적 성장 추구를 기대한다"면서 순자 권학편에 나오는 '登高望遠(登高望遠)'을 언급,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본다는 자세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
 - 김 총리와 후 주석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6자 회담과 남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 총리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고, 후 주석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고 화답했다.
 - 아울러 양국의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와 관련, 김 총리가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후 주석의 관심을 부탁하자 후 주석은 "완공된 발전소에 대한 안전 검사뿐 아니라 계획 중인 발전소도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부와 함께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방한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후 주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 이 자리에는 중국 측에서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회담을 방불케 하는 의제와 자리 배치 등을 통해 중국 측이 김 총리를 예우했다는 인상을 줬음.
- <김총리 방중 마무리..한중 협력증진 기여>(4/15)
- 김황식 국무총리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초청으로 이뤄진 3박4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 귀국하였음.
 - 김 총리는 방중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원 총리 등 중국 권력서열 1~3위를 잇따라 만나 원자력 협력 강화 등 한·중 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끌어내면서 외교 무대에 무난하게 안착했음.
 - 특히 작년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으나 이번 공식 방문을 통해 양국의 우의를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중국 측도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이 올해 들어 첫 고위급 방문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음.
 - 김 총리는 먼저 13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총리 회담에서 작년 천안함 폭침을 언급하며 한반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고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음.
 - 이에 대해 원 총리는 "남북 대화가 빨리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수차례 이해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 총리가 우리가 처한 입장에 대해 다소



- 이례적으로 여러 번 이해를 표시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음.
- 김 총리는 또 회담을 통해 최근 일본 원전 사태와 관련, 비상시 정보 교환 등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키로 했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국 측의 지지를 당부, 원 총리로부터 지지 의사와 함께 성공을 기대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음.
 -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넘긴 1시간30분가량 진행됐으며 시종 일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14일 후 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다소 이례적으로 회담을 방불케 하는 의제가 논의됐음. 자리 배치도 일반적인 예방과는 달리 양쪽으로 놓인 테이블에 양측이 일렬로 마주보고 앉아 회담 분위기를 연상케 했음. 김 총리에 대한 중국 측의 예우가 엿보이는 부분으로, 이번 방문에 대해 중국이 그만큼 무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함.
 - 김 총리는 후 주석이 제시한 정치 신뢰 심화 등 4개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FTA와 관련, FTA 협의 가속화를 희망하는 후 주석에게 농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분명히 했음.
 - 김 총리는 이밖에도 보아오(博鳌)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미콜라 아자로프 우크라이나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음. 또 15일 '포용성 개발: 공동 과제와 새로운 도전' 주제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포용적 성장·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방중으로 한·중 양국의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연평도 포격 이후 양국의 불협화음에 대해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됐고 양국 현안과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논의로 관계 발전에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음.
 - 김 총리도 14일 베이징(北京) 특파원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관련, "북한을 두둔하고 (남북한을)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음.

● 中 상무부장 "한·중, FTA 모의안 교환" (4/15)

-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위한 모의 방안을 교환했음.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장관은 15일 보아오(博鳌)포럼이 열리고 있는 소피텔호텔에서 한중 FTA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김중훈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갖고 서로 모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김 본부장은 지난 11일 하루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천 부장과 만나 한·중 FTA를 포함한 양국 통상관계 증진 방안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국제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천 부장은 "한·중 쌍방이 모두 FTA 관계 수립을 희망하고 있어 한 두



- 달 안에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중 양국은 김 본부장과 천 부장 사이의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5월 말 또는 6월초에 국장급 대표 간 후속 협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천 부장은 '모의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천 부장은 "그러나 쌍방에 모두 민감한 제품과 문제가 있다"면서 "양국 FTA 협상은 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양국 국민의 지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천 부장은 또한 김황식 총리가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FTA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양국 총리의 의견도 고려할 것"이라며 "나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모두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나갈 수 있을 만큼 현명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한·일 후쿠시마 사태 전문가협의 도쿄서 개최(4/12)

-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대량 방출 사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전문가 협의가 이틀 일정으로 일본에서 시작됐음.
- 12일 오전 10시께 도쿄에 있는 일본 외무성 3층에서 열린 양국 전문가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정일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을 비롯해 강정환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사무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 전문가 등이, 일본 측에서는 고다마 요시노리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일한경제실장과 원자력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했음.
- 고다마 일·한 경제실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일한(한일) 양국의 원자력에 관한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발언했고, 이정일 참사관도 "이번 회의가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앞으로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양측은 협의 첫날인 12일 원전 안전관리와 대책, 방사능 측정과 모니터링, 식품안전 관련회의를 잇달아 열고 13일 오전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임.

● 한국, 원전 전문가 日 파견 다시 제안 (4/13)

-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 회의를 열고 한국 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배구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의위원 등 대표단은 13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 13일 이틀간 일본에서 일본 측 전문가를 만나 협의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 하겠다'고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 측은 지난달 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한차례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일단 양국 전문가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수정 제의했음.
- 한국 측은 이번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 다시 "원자력발전소와 생활방사선 분야 전문가를 보낼테니 원전 주변 상황 등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했고,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측에 각종 원전 관련 자료를 제공한 뒤 "앞으로 한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을지 추가 논의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측의 태도로 볼 때 향후 한국 측 전문가 파견이 성사될지, 장비 제공에 그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대표단의 일원인 송진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협의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받았고, 추가 자료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받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귀국한 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본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 하겠다"고 말했음.

● 日외상, 독도 해양기지 "도저히 수용불가" (4/15)

- 한국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의 행동에 나서자 일본 정부와 제1야당인 자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의 마쓰모토 다케이키(松本剛明) 외무상은 15일 오전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음.
-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 부근의 일본 영해 내에 계획하고 있는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을 현대건설이 낙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밤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앞서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조회장은 14일 오후 한국대사관을 찾아 권철현 대사에게 독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음. 이시바 정조회장은 "일본이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권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은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민을 자극해왔다"면서 "한국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한 원인은 일본 측에서 먼저 제공했다"고 말했음.
- 권 대사는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은 위안부 할머니까지 나서 일본을 돕자는 감동적인 국민운동이 일어났다"면서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내놓아 오후 분위기를 꺾고 한국 국민은 엄청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이시바 정조회장은 이날 권 대사와의 회동에서 일본이 조선왕실의



궤 등의 도서를 한국에 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의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 자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국에 일본서 건너간 도서 100만점 존재" (4/17)

-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에 건너간 도서가 100여만 점에 이르는 조사 결과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음. 이 통신은 한국 정부가 한·일 도서협정과 관련, 일본 외무성의 요청을 받아 일본에서 유래한 도서를 조사한 결과 쓰시마중가문서(對馬宗家文書) 등 100여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이 가운데 쓰시마중가문서를 포함해 일부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음. 쓰시마중가문서는 조선과의 외교기록 등이 포함돼 있고, 국사편찬위국가약 2만8천책을 소장하고 있음.
- 이번 조사는 일본 국회에서 한일도서협정의 심의에 들어가는 전제조건으로 자민당이 요구했고, 일본 외무성이 이를 받아 한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해 이뤄졌음. 일본에서 조선총독부 등을 통해 건너간 도서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5개소에 보관돼 있음.
- 자민당은 한·일 도서협정과 관련, 일본으로부터 도서를 반환하는 반대급부로 한국도 일본 도서를 돌려주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음. 하지만 외무성은 한국에 있는 일본도서의 인도 요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연구 목적의 접근이나 보존 개선 요청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궁내청 등이 보관하고 있는 한국 도서는 대부분 일제 통치 시절 조선총독부 등이 강제로 반출한 것이지만 한국이 보관하고 있는 일본도서는 한국이 강탈한 것이 아니라 일본 총독부가 한국에 남겨둔 것임.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중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 도서협정의 국회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이고 자민당이 금주부터 국회 심의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추진하는 독도 주변 종합해양과학기지의 건설에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日정부 오염수 방출 설명회 韓러 결석?>(4/17)

- 일본 정부가 이달 4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방출하기 몇 시간 전에 도쿄 주재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음.
- 이 통신에 따르면 오염수를 방출하기 3시간 전인 4일 오후 4시께 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일본 외무성이 개최한 설명회에 미국과 캐나다 등 51개국은 참석했지만 한국과 러시아 등 140여 국가기관은 참석하지 않았음.
- 이 통신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오염수 방출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국과 러시아 등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대해 '너무 일방적이다'는 목



- 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는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임.
- 일본 외무성 정책과장이 오염수 방출 3시간 전에 외국 대사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것 맞지만 오염수 방출 후 설명회 자료를 팩스로 받아본 결과 "오염수 방출을 준비,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을 뿐 언제 방출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는 것임.
 - 교도통신에 의하면 오염수 방출 시작 2분 후인 오후 7시 5분께 이날 설명회에 불참한 외국 대사관에 보낸 외무성의 팩스 내용은 "방출이 오늘 중에 시작된다"는 미래형이었음.
 -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 사실을 안 것은 외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후 4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였음. 에다노 장관은 외무성과 달리 오염수를 이날부터 방출하겠다고 명확하게 발표했다.
 - 대사관 관계자는 "오염수 방출은 정확한 시간과 규모가 충분히 사전에 통보됐어야 했다"면서 "오염수 방출 3시간 전에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국 대사관에 설명한 것을 사전통보라고 얘기하는 건 책임의 회피"라고 지적했음.

라. 미·중 관계

● 中, 美에 '너나 잘해' 식 인권보고서 대응(4/11)

- 중국이 자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한 미국의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 '너나 잘해' 식의 맞불 보고서를 내놨음.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1일 '2010년 미국 인권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한자 1만 3천 자를 담은 초대형 보고서를 발간했음. 이는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선 것으로 올해로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음.
-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미국은 자신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채 또다시 중국을 포함해 세계 190여 개국의 국가별 인권 상황을 왜곡한 보고서를 내놨다"며 "미국이 자국 내 현실을 직시토록 하려는 차원에서 신문판공실이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 보고서는 오로지 미국 인권 현실만을 거론한 것임.
-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권실태를 생명과 인신 안전, 국민의 정치 권리, 경제·사회·문화권리,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의 권리,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침해 등 6개 분야로 나눠 비판했음.
- 보고서는 우선 2009년 미국 내에서 430만 건의 폭력범죄, 13만 3천 건의 개인 절도 등의 범죄가 횡행했고 인구 1천 명당 17.1명이 폭력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인신 안전 문제를 거론했음.
- 이어 2009년의 폭력 범죄 가운데 22%가 총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절도 행위자 47%가 총기를 휴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 내 치안 부재를 부각시켰음.
- 보고서는 이어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지난해 6월 24일 '국유자산으



- 로서 사이버공간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비상상황 시에 미 대통령에게 인터넷 통제권을 줬다며 미국의 인터넷 정책을 겨냥했음.
- 아울러 지난해 11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9.8%로, 실업자 수가 1천500만 명에 달했으며 지난 2009년에 미국인 4천400만 명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인식해 그 숫자가 전년인 2008년보다 400만 명가량 늘었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또 미국의 노숙자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건강보험 비(非) 수혜자 수도 증가추세이고, 중오 범죄가 느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문했음.
 - 특히 이라크 전쟁에서 적어도 10만9천명이 희생됐고 그 중에 63%가 민간인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숨졌으며 2009년에 미국 주도의 나토군이 수행하는 아프간 전쟁에서 535명의 현지 민간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지적했음.
 - 미 행정부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201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놓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9일 "권세를 가진 자가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편견과 오만을 바꾸지 않으며 중국의 인권 상황을 함부로 말했다"고 반발했음.
 - 이어 같은 날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빌미로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 한다"고 입장을 밝혔음.

● 中, 美에 "대만에 무기 팔지 말라" 촉구(4/12)

- 중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중단하라고 미국에 재차 촉구했음. 중국은 1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7차 미·중 국방부 공작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고 대만에 무기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음. 중국 측은 아울러 미 항공모함의 중국 경제구역 내 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음.
- 이에 미국 측은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과 군사력 강화에 우려를 표시하고서 양 국 군이 지속적인 대화로 서로 믿음을 강화해 잘못된 판단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측은 특히 해상안전을 포함해 비전통적인 안보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아울러 중국 인민해방군의 천빙더(陳炳德) 총참모장의 방미 문제도 논의했음.
- 천 총참모장은 다음 달 방미할 예정으로, 지난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이어 이뤄지는 것임. 미·중 양국은 작년 초 대만의 무기판매 문제로 관계가 악화하면서 군 고위급 인사 교류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천 총참모장의 방미로 이런 경색 국면이 해소될지 주목됨.
- 미·중 국방부 공작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마이클 시퍼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중국 측에서 첸리화(錢利華) 국방부 외사관공실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음.



마. 미·일 관계

● 美 클린턴 국무 "日 피해복구 전력 지원" (4/17)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17일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피해복구를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하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안정을 위해서도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일본의 복구와 부흥을 흔들림 없이 지원 하겠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결속을 보이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그러나 양국의 최대 현안인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 클린턴 美국무, 日왕 부부에 악수와 입맞춤 인사(4/17)

- 일본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일왕 부부에게 악수와 입맞춤을 건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겪었던 '인사 논란'을 피해갔다.
- 후쿠시마(福島) 원전사태 수습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17일 도쿄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 부부를 만났음. 클린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키히토 왕과 악수를 했고, 미치코(美智子) 왕비와는 손을 잡고 뺨을 맞대며 가벼운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눴음.
-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아키히토 왕에게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어났음. 당시 보수진영은 미국민의 대표자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고, 미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적 의례'(protocol)을 지켰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日총리 "미국의 지원 영원히 잊지 않겠다" (4/17)

-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미국의 지원에 대해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최상의 감사를 표시했음.
- 간 총리는 17일 오후 일본을 공식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관저에서 만나 "미군과 국무부 등 미국의 각 기관이 일본을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고 지원해준데 대해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미국은 일본 경제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면서 "일·미 동맹에 의한 지원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히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앞서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정을 위해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



겠다고 약속했음. 클린턴 장관은 "일본의 복구와 부흥을 미국은 흔들림 없이 지원하겠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결속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바. 중일 관계

● 日관광장관, 中에 "관광 와 달라" 구애(4/11)

- 일본 관광행정의 수장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구애에 나서고 있음. 미조하타 히로시(溝畑宏) 일본 관광청 장관은 10일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관광업이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중국 관광객의 미소가 일본인을 격려해줄 것"이라면서 일본 관광을 권유했음. 미조하타 장관은 지난달 11일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후 방중 한 일본 최고위급 인사임.
- 그는 "작년에 일본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141만 명에 달했고 올들어 1~2월에도 20만 명을 넘었으나 대지진과 쓰나미가 나고서 급감했다"면서 "일본 관광산업 회복에 중국 관광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그러면서 "재난이후 센다이 공항을 제외하고는 여타 국제공항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신칸센과 고속도로도 제대로 기동되는 등 교통은 정상을 회복했다"고 소개했음.
- 아울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발(發) 방사성 물질들이 대기 기류를 타고 일본 밖으로 퍼지고 있으나 극히 미량이어서 건강에 위험을 줄 수준은 아니며 식품안전은 물론 생수 공급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일본 관광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국 내 자국 공관들과 협력해 일본 관광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미조하타 장관은 "대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일본 북동쪽에는 관광 명소가 많다"며 "중국 관광객들이 벅빳이 만개한 요즘 일본을 찾으면 평생 잊지 못할 일본의 아름다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